

사기이용계좌의 59%가 왜 예외 계좌에서 나왔나

예외 기준을 거래소가 각자 정했고 통일된 최소기준이 없었다

금융위원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원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조해 예외 기준, 이용자 불편과 피해금 보전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8.23	연번	2026_56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조치의 핵심이 출금을 늦추는 것 자체보다 예외 기준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에 있다고 본다. 제도 도입 뒤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랐고 2025년 6~9월 사기이용계좌의 59%가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통일된 내규가 생겼지만 법령·이용자 고지와의 관계는 더 분명해져야 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2025년 6~9월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이용계좌 2,526건 중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했지만 예외기준의 공개 범위와 법적 지위는 남은 문제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거래소별로 달랐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통일한 표준내규를 배포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제도 최초 도입	2025년 5월	금융당국·DAXA·거래소
사기이용계좌	2,526건	2025년 6~9월
예외대상 계좌	1,490건·59.0%	같은 기간
예외계좌 피해금	1,705억원·75.5%	전체 2,257억원
예외 고객 감소	기존 대비 1% 이내	2025년 말 기준 시뮬레이션
예외고객 확인	연 1회 이상	강화된 고객확인·모니터링

금융당국 점검 결과 거래소들은 자체기준으로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했고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기준이 쉽게 충족되면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통일된 표준내규는 가상자산 거래횟수·거래기간·입출금금액을 필수 고려요소로 두고 구체적인 예외불가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세부 수치 기준은 우회를 막기 위해 공개자료에 가림 처리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외적용 고객에게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사기범 명의의 거래소 연계계좌에서 거래소 모계좌와 거래소 안 사기범 계정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바뀐 뒤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출금 지연은 마지막 이동에 시간을 두는 장치입니다.

모든 출금을 늦추면 정상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므로 거래소는 일정한 거래이력 등을 충족한 고객에게 예외를 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별 자체기준이 다르고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가장 쉬운 기준을 충족해 예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차단 시 사유의 사전 통지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정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는 출금 지연 제도가 이 조문의 차단에 해당하는지, 표준내규와 법령의 관계가 무엇인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과 시행령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피해 방지·환급 체계에 편입하려 하지만, 출금 지연 예외의 세부기준을 법령에 직접 적는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2025년 6~9월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이용계좌 2,526건 중 예외대상 계좌는 1,490건으로 59.0%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전체 2,257억원 중 1,705억원, 75.5%였습니다.

통일 기준을 2025년 말 고객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예외대상 고객은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행 뒤 실측 피해 감소율이 아니라 고객 분류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예외에서 빠진 정상 이용자는 원화 입금 뒤 일정 시간 가상자산을 바로 출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하게 즉시 출금이 필요한 사유에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공개 수치 기준과 처리시간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외계좌 건수	59.0%	1,490÷2,526
예외계좌 피해금	75.5%	1,705÷2,257
예외고객	1% 이내	기존 대비 시뮬레이션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법적 지위

통일 기준은 표준내규에 있고 출금 지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의 차단에 해당하는지는 발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02 · 이용자 고지

예외 가능 여부, 지연 사유와 해제 예정시점을 거래 전에 어떤 형식으로 알릴지 공통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3 · 세부기준 공개

우회 방지를 위해 수치가 비공개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정상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최소 설명 범위가 필요합니다.

04 · 시행 후 성과

예외대상 고객 1% 이내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시행 뒤 사기이용계좌·피해금과 정상 이용자 지연 건수의 실측값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출금이 지연되면 고객센터에 지연 사유·해제 예정시점·추가 확인 자료를 묻고 답변과 화면을 저장합니다.
- 전화·문자의 지시로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사서 보내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확인합니다.
- 이미 송금했다면 112에 신고하고 돈이 나간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구제와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대상회사

- 거래 전 화면에 출금 지연 적용 범위, 일반적인 지연시간, 예외신청·추가확인·이의 절차를 표시합니다.
- 지연 건마다 사유·해제 예정시점·담당 절차를 개별 안내하고 예외 재심사 기록을 남깁니다.

당국

- 출금 지연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의 관계, 표준내규의 감독상 지위와 최소 공개범위를 문서로 밝힙니다.
- 예외대상 고객 비중, 사기이용계좌·피해금과 정상 이용자 지연·민원을 같은 정의로 공개합니다.

갈림길**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표준내규에 남는가, 법령상 기준으로 이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통일된 표준내규는 시행됐지만 제11조와의 관계, 이용자 고지와 개정 절차가 확정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A

표준내규 중심 운영
우회 수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기준의 공개 범위와 변경 절차는 금융당국·DAXA·거래소의 운영에 달립니다.

B

법령·감독규정으로 명확화
근거·고지·보고와 이의 절차를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범죄 우회를 막기 위한 비공개 세부값은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당국의 기준 적정성 재심의 결과, 2026년 10월 시행 법령·하위규정과 거래소 이용자 안내의 공통 항목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5개의 연결 지식

금융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금융제도 계좌 지급정지 제도 ↗

금융상품 가상자산 매매 ↗

금융사건 20년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 ↗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12건

01	1차 · 2025년 5월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도입과 거래소별 상이한 자체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2026년 4월 8일 보도자료 원문 열기 ↗
02	1차 · 사기이용계좌 2,526건 중 예외대상 1,490건(59.0%) 위 동일. 출금지연 예외 관련 피해발생 현황 표 원문 열기 ↗
03	1차 · 피해금 2,257억원 중 예외대상 계좌 1,705억원(75.5%) 위 동일. 건수·금액·비율 표 원문 열기 ↗
04	1차 · 거래횟수·거래기간·입출금금액 필수 고려와 구체적 예외불가 요건 위 동일. 출금지연 예외 기준 강화안 원문 열기 ↗
05	1차 · 통일 기준 시뮬레이션에서 예외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 위 동일. 2025년 말 기준 시뮬레이션 원문 열기 ↗
06	1차 · 예외고객 연 1회 이상 강화된 고객확인과 모니터링 시스템 위 동일. 집중 모니터링 계획 원문 열기 ↗
07	1차 · 정당한 사유 없는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금지와 사전 통지·금융위원회 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문 열기 ↗
08	1차 · 사기이용계좌 정의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 원문 열기 ↗

09	1차 ·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의무 통신사기피해한급법 제4조 원문 열기 ↗
10	1차 · 가상자산사업자를 피해 방지·피해구제 체계에 편입한 개정법의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15일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열기 ↗
11	파생 · 예외계좌 건수 59.0% $1,490 \div 2,526 = 0.5899...$,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12	파생 · 예외계좌 피해금 75.5% $1,705 \div 2,257 = 0.7554...$,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추적 예정	시행 후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이용계좌 중 예외대상 비중, 피해금과 정상 이용자 지연·민원, 2026년 10월 시행 법령에서 표준내규와 이용자 고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PDF의 발행 연번 NB-2026-070을 실제 공개 순서에 맞춰 NB-2026-056으로 바로잡고,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에서 1,490/2,526건과 1,705/2,257억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DAXA·가상자산거래소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피해구제·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